



| 제3차 충남사회적경제 콜로키움 |

■ 토 론 1

# 사회적기업 정책의 과제

| 최 선 희 사무처장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 사회적기업 정책의 과제

최선희((사)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사무처장)

- 사회적기업의 인증 정책은 정부의 인증제 중심의 선별적 육성 제도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 인증제를 통한 선별적인 지원제도의 고착화, 아니면 등록제와 같은 보편적인 지원 제도로 재설계의 기로.
  - 인증제에서 탈락된 사회적기업들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가?
  - 마을기업 재심사에서 탈락된 기업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 사회적기업은 수익을 창출하여 자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노동생산력이 취약한 사회적기업들이 시장경쟁력을 통해 자립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로 과연 가능할 것인가.
  -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면서 시장기반의 경제적 가치를 올리는 것 쉽지 않음.
- 취약계층의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노동통합 사회적기업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지원기간(한시적 지원정책, 안정적인 지원정책)/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정부의 지원보조금.
  - 취약계층의 서비스제공/ 수입 창출하여 시장에서 자립하는 것 불가능/ 보건복지부의 바우처 사업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정책 목적 및 대상의 범위에 관한 쟁점/ 취약계층과 고용창출에 둘 것인지, 아니면 사회서비스제공, 지역사회 재생, 지역공동체의 활성화, - 정책대상의 확대/ 사회적 목적의 범위가 취약계층에 초점을 두고 있어 협소함. 인증제도의 개편이 요구됨. 정책대상의 폭넓은 확장이 요구됨.
  - 고용창출 패러다임에서 사회서비스의 혁신과 지역사회의 재생으로 전환이 요구된다. 여기서 고용창출의 유발은 그 정책의 결과물이 될 것임.
- 사회적기업의 지방화 추진에 대해서 ‘자율과 분권에 기초한 육성’마련
  - 지방정부는 중앙정부 정책과 연계하면서도 지역특성과 지역사회의 필요에 부응하는 독자적인 정책수립이 필요.
  - 정부 직접지원정책, 지방정부 간접지원정책
- 권역별 지원기관 운영에 대한 견해
  - 기존의 산학협력단, 지방자치의 출연기관 등에 지원했던 위탁금액을 그대로 유지하

면서 민간주도의 자율성과 주도성이라는 미명하에 운영되고 있지만 이는 기본적인 인프라를 갖춘 가운데 진행되었던 기존 지원기관과 민간의 지원기관의 차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정책이라고 본다.

예비사회적기업 1기업체 운영에도 못 미치는 운영비로 위탁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적게는 70-80개, 많게는 수백 개의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수탁기관으로서의 최소한의 면모를 갖추기에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지원기관의 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 <나아갈 방향>

1. 지방정부는 시민사회의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참여와 역량 개발에 초점을 둔 정책집행으로 가야한다.

사회적기업을 실제 경영할 주체는 지역사회주민과 사회적기업가로서 지방정부는 우호적 환경조성 (공공서비스 구매, 공공서비스 위탁), 인프라 구축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지원에 우선적인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2. 사회적기업을 지역사회 필요와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적인 주체로서 범위와 위상을 폭 넓고 다양하게 설정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필요와 특성을 반영하는 조례제정 바람직.

3. 기존의 일자리 창출 목적의 사회적기업 정책에서 벗어나 사회서비스 혁신을 목적으로 둔 사회적기업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정부 관할 하에 있는 사회서비스, 조달사업, 위탁사업 등의 공공자원에 관한 적극적인 자원이 동반되어야 한다.

4.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으로 기존의 사회적기업들이 협동조합으로 조직형태 전환에 따른 대비책이 필요하다. 무조건 협동조합으로 변화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협동조합의 가치, 이념, 운영방식을 얼마나 정확하게 내면화시키고 일상화시킨 가운데 가능하게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라고 본다. 협동조합운동과 교육은 불가분의 관계로 협동조합적인 정서를 생활로 나타낼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